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대안)

의안 번호	1319
----------	------

제안연월일 : 2012. 8.

제안자 :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7월 31일 일본 정부가 2012년도 「방위백서」에 또다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교청서」와 일부 중·고교 교과서에도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이 같은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반복된 도발행위는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됨은 물론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재천명하고,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와 「외교청서」 등에

또다시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했던 행위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한-일 양국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과 더불어서 새로운 미래지향적 선린우호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줄 것임을 경고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왜곡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원칙을 갖고 치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경위

2012년 8월 2일 심재권의원 등 127인이 발의한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과 2012년 8월 17일 정문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 및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을 각각 제31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2. 8. 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위 2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제안이유

지난 7월 31일 일본 정부는 2012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하면서 또다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외교청서」와 일부 중·고교 교과서에도 왜곡된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계속해오고 있음.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므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고, 이는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여 우리의 영토를 침해하려는 과거 제국주의적 야욕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으로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시아 평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바,

일본 정부의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동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의 보다 치밀한 대응을 주문하기 위함임.